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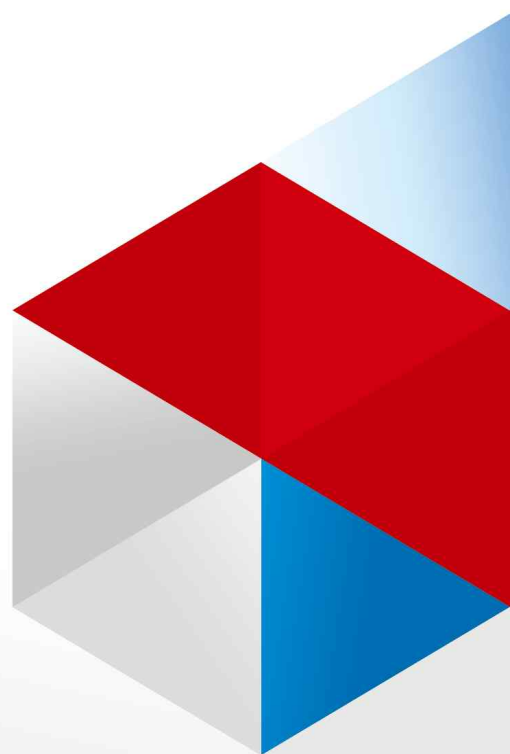
2023-2 | 디지털플랫폼정부 시리즈

# 2023 WEF와 새로운 글로벌 협력 모델 '디지털플랫폼정부'

# 2023 WEF와 새로운 글로벌 협력 모델 ‘디지털플랫폼정부’

## CONTENTS

I. 2023 세계경제포럼의 세계 경제 전망	01
II. 2023 글로벌 리스크 - 복합위기와 분열된 세계	04
III. 글로벌 협력 모델로 부상한 ‘디지털플랫폼정부’	09





DPG+ (Digital Platform Government +) 시리즈는 국가 주요 정책 아젠다인 '디지털플랫폼정부(DPG)' 추진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발간하는 보고서입니다.

#### | 작 성 및 문 의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책본부 AI·미래전략센터  
김 영 은 선임연구원 (053-230-1294, [yekim0928@nia.or.kr](mailto:yekim0928@nia.or.kr))

#### | 기 획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책본부 AI·미래전략센터  
신 선 영 센터장, 김영은 선임연구원

1. 본 보고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수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ICT진흥 및 혁신기반조성(정보화, R&D)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2. 본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이라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I. 2023 세계경제포럼<sup>1)</sup>의 세계 경제 전망

### ■ 2023 세계경제포럼(WEF)은 분열된 세계에서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강조

- 세계 정상들이 모여 글로벌 아젠다를 논의하는 WEF는 53회째 개최(1.16~20.)
  - 미국·중국·프랑스·일본·러시아 등 주요 7개국(G7) 정상 대부분이 불참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등 세계 각국에서 52명의 정상급 인사가 참석
  - 그 밖에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600여 명, 국제기구의 대표급 인사 39명, 각국 중앙은행 총재 19명과 재무장관 56명, 외교장관 35명, 무역장관 35명을 포함해 정·재계 및 학계 주요 인사 2,7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관심사를 논의
  - 2023 WEF의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 협력(Cooperation in a Fragmented World)'으로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
  - 주요 프로그램은 ▲기후변화 대응, ▲저성장·고부채·고물가 경제 문제 해결, ▲첨단기술 기반 산업 재편, ▲사회 취약성 해결, ▲지정학적 위험 대처 등 5개 주요 의제에 대해 총 220여 개의 세부 세션을 진행

#### 【 2023 WEF의 5대 아젠다 주요 내용 】

5대 아젠다	문제 인식
기후변화 대응	□ 에너지, 기후 및 자연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의 맥락에서 현재의 에너지 및 식량 위기 해결 -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신흥국의 경제 성장과 에너지 소비의 분리, 기술 혁신의 주류화 및 형평성 해결 등 조치가 중요하며, 2030 탄소제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보다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인프라 투자 계획이 필요
경제 문제 해결	□ 투자, 무역 및 인프라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의 맥락에서 현재의 고물가, 저성장, 고부채 경제 문제 해결 - 한정된 재정과 인플레이션 압력은 긴축통화정책 강요와 신흥국과 일반 국민에 부채 상환의 부담 가중, 보호주의적 조치는 국제 무역 질서를 위협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이후 극심한 빈곤과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인프라 투자 부족으로 연쇄 파급되는 가운데, 분열된 세계에서 경제질서와 국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재건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신중한 협력과 경제적 번영을 위한 새로운 비전이 필요
첨단기술 기반 산업 재편	□ 민간 부문 혁신 및 회복력을 위한 첨단 기술 활용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의 맥락에서 현재 산업의 역풍 해결 -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지정학적 분열 등 직면한 위기 상황에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은 신기술 육성과 조직의 민첩성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화되는 생태계 전반에서 협업 강화 필요
사회적 취약성 해결	□ 일자리, 기술 및 돌봄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의 맥락에서 현재의 사회적 취약성 해결 - 다양한 직종에서 일자리 수급 불균형과 함께 신흥시장 경기 둔화로 인한 실업 압력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이동성과 미래 보장 경제의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 기술, 의료에 대한 대규모 투자 지원을 통한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
지정학적 위험 대처	□ 다극 세계에서 대화와 협력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의 맥락에서 현재의 지정학적 위험 대처 - 자유무역의 무기화, 기후변화 대응 경쟁 등 협력의 모범인 분야의 경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판도는 협력에서 경쟁으로 변화되는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글로벌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 증가

1)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 정·재계 리더들이 모여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로, 매년 1월 스위스 동부 휴양지 다보스에서 개최해 다보스포럼이라고도 부름.

## 참고 1 | 2023 WEF 주요 특별연설 내용

- WEF에 참석한 주요국 정상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과 함께 세계평화의 회복을 위한 과제, ▲클린테크 전환의 가속화에 따른 국가 간 투자 경쟁의 양상과 지속가능한 경제 실현을 위한 과제, ▲중국의 코로나19 정상화 정책과 개방을 통한 무역과 투자 재개 등 현재 직면한 주요 이슈에 대해 전 세계가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피력

### 【 2023 WEF에서 발표한 주요국 정상의 특별연설 내용 】

#### 주요 프로그램

##### □ 올레나 젤렌스키(Olena Zelenska) 우크라이나 영부인의 특별연설(1.17)

- 전 세계 정·계 지도자들을 향해 전쟁의 참상을 전하며, 지속적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촉구함과 동시에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영향력을 결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상) 2023년 1월 14일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드니프로시의 9층 아파트가 붕괴한 사건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사망자가 43명을 넘어선 것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 인간으로서 공감할 수 있는 문제라 비판
- (세계 안보, 단합과 평화) 러시아의 침공이 단순히 우크라이나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포럼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가진 강력한 영향력이 때로는 세계를 분열시키는데 사용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고, 이러한 힘이 인류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각국의 단합과 평화를 강조하면서 변함없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줄 것을 피력

##### □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집행위원장의 특별연설(1.17)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전 산업 분야의 '클린테크' 전환의 필요성과 함께 이는 반드시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접근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국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미국과 중국을 비판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향후 10년간 클린테크 분야에 3천690억 달러를 투입하는 산업의 친환경 전환으로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해 미국 IRA의 특정 요소를 두고 우려도 제기하며, 범대서양의 무역과 투자가 분열을 방지하고, 각각의 인센티브 제도가 공정하고 상호 보강될 수 있도록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
- (중국의 보호주의 무역) 값싼 에너지, 낮은 인건비, 낮은 환경 규제 등 국외 산업체들의 자국 이전 권장, EU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접근 제한 등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강경히 대응하고, 핵심 광물 분야의 대중 의존도 축소 및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제3국과 협력 강화

- (EU의 역외보조금 규정, '23.7 시행) EU 역외 기업이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EU 내 기업 인수 합병, 공공 입찰 참여 등 불공정 경쟁에 대한 규제 강화, 전략적 클린테크 가치사슬 관련 생산시설 지원, 외국의 보조금 제도로 인한 EU 생산시설들이 이전할 위험 대응 보조금 지급 규정의 한시적 조정

- (유럽주권펀드 조성) 유럽주권펀드(European Sovereignty Fund)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 관련 핵심 연구혁신, 전략적 산업 프로젝트를 증진하기 위한 구조적 해결책을 제공

##### □ 류허(Liu He) 중국 부총리 특별연설(1.17)

- 코로나19 완전 봉쇄 정책에서 리오픈(Reopening)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의 완전한 경제활동 재개를 알림과 동시에 국유기업 개혁, 민영기업 지원, 외국인 투자 장려 등 중국의 개방 및 개혁 정책에 관한 추진 방향을 제시



- (코로나19 확산 완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은 정점을 지나 안정화되고 있으며, 중국 경제도 정상적인 성장세로 전환되는 가운데, 수입·기업투자·소비가 증가하고 질적으로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
- (개방과 개혁 경제 정책) 중국이 추구하는 공동부유는 절대 평균주의와 복지국가 주의가 아닌 양극화를 피하고 공동 발전에 의지해 모든 사람이 노력과 근면으로 부자가 되는 것으로, 전면적 개방을 통해 민간 부문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며 거대 국영기업의 개혁을 심화할 것을 강조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견제) 중국은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지양하며, 냉전시대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비판하고, 개방은 경제발전의 핵심 동력을 강조

- (외국인 투자 유치) 혁신주도개발을 위한 법치주의 준수 등 중국이 추진 중인 경제 정책을 소개하면서 중국은 전면적 개방을 촉진하고 개방의 수준과 질을 향상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 노력할 것을 피력

## ■ 2023년 세계 경제와 정치·사회적 분위기는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전망

### ■ 글로벌 리더 및 주요 언론은 세계 경제의 '복합적 위기'(Polycrisis)'와 WEF의 '침울한(Somber)' 분위기를 전달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촉발된 탈세계화의 움직임은 미국과 중국 간 신냉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정치·경제·안보 분야 간 상호 연계되어 세계의 분열(Fragmentation)을 가속화
-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지정학적 분열 심화), 저성장·고물가(불균형 성장), 기후 위기, 금융 취약성 증가 등 상호 연결된 위험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향후 10년의 세계 경제는 암울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시사

※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WEF에 참석한 CEO 등 4,41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73%가 “향후 12개월 동안 글로벌 성장이 감소해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

- 반면, 포럼의 피날레 의제인 ‘글로벌 경제 전망 : 시대의 종말인가?(Global Economic Outlook: Is this the End of an Era?)’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유럽중앙은행 총재\*\* 등 경제계 저명인사가 전망한 2023년 세계 경제는 ‘보수적 방어’에서 ‘경쟁과 성장’으로 분위기가 전환됨에 따라 낙관적 전망도 공존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세계 경제가 비록 우려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지만, 나쁘지 않다는 것이 좋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에 조심해야 한다.”라고 언급

\*\*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중국의 방역 정책을 최적화 한 것이 글로벌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현재 세계 경제가 이전 전망보다 호전되고 있다.”라고 진단

### ■ WEF의 핵심 가치였던 ‘세계화’가 ‘복합적 위기’로 강력한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새로운 세계화’, ‘성장을 위한 경쟁’ 등 핵심 의제로 등장

- (새로운 세계화 등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지정학적 갈등과 경제 블록화·기술 탈동조화 등 기존의 시장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복잡한 정치 중심의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과 정책 방향의 재편이 필요
- (성장을 위한 경쟁) 기술 디커플링 및 무역 경쟁(미국-중국), 에너지 보조금 경쟁(미국-유럽) 등 자유무역 질서의 퇴조가 산업과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선진국과 개도국 등 모두의 시장을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선순환 경쟁을 추구
-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시장의 비효율을 초래했고, 에너지의 무기화가 촉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국가경쟁력 확보는 디지털 전환과 그린에너지 시장을 우선 선점하는 것이 핵심

## II. 2023 글로벌 리스크<sup>2)</sup> - 복합위기와 분열된 세계

### ■ WEF는 최근 2년간 기후변화·사회결속약화·사이버보안의 위협을 지속 경고

- WEF는 2023년 인류가 직면한 경제·환경·지정학·사회·기술 분야의 위험요소와 미래 대응 방안을 담은 ‘Global Risk Report 2023’ 보고서를 발표(‘23.1)
  - WEF는 매년 포럼 직전 각 분야 전문가 1,200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리스크 인식 조사(GRPS, Global Risks Perception Survey)’ 조사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위험요인을 제시
  - 올해도 현재의 위험, 2년 이내 발생할 단기 위험, 향후 10년 간 발생가능한 장기 위험 등 3가지 시간 프레임을 중심으로 경제·환경·지정학·사회·기술 분야로 위험을 분류하고, 발생 시점 기준으로 총 32개의 위험 요소를 소개
  - 최근 3년간 주요 위험 요소로 제시된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기후 및 환경 문제는 꾸준히 제시되고 있으며, ‘생계비 위기(Cost-of-living crisis)’, ‘지리경제적 대립(Geoeconomic confrontation)’ 등 주요 경제적·지정학적 리스크는 새롭게 부각

【 최근 3년간(2021~2023) 글로벌 주요 10대 리스크 】

순위	2021		2022		2023	
	가능성	파급력	단기	장기	단기	장기
①	극단적 이상 기후	감염성 질병	극단적 이상 기후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실패	생계비 위기	기후변화 완화 실패
②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실패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실패	생계비 위기	극단적 이상 기후	자연재해 및 극단적 이상 기후	기후변화 적응 실패
③	인간의 환경 훼손	대량 살상무기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실패	생물 다양성 감소	지리경제적 대립	자연재해 및 극단적 기후 변화
④	감염성 질병	생물 다양성 감소	사회결속 실증	천연 자원 위기	기후변화 완화 실패	생물 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파괴
⑤	생물다양성 감소	천연자원 위기	감염성 질병	인공자연 재해	사회결속 실증 및 사회 양극화	대규모 비자발적 이주
⑥	디지털 권력 집중	인간의 환경 훼손	정신건강 악화	사회결속 실증	대규모 환경 재난 재해	천연자원 위기
⑦	디지털 불균형	생계비 위기	사이버 보안 실패	강제 이주	기후변화 적응 실패	사회결속 실증 및 사회 양극화
⑧	국제관계 균열	극단적 이상 기후	재정 위기	기술 진보 역기능	사이버범죄 성행 및 사이버 보안	사이버범죄 성행 및 사이버 보안
⑨	사이버 보안 실패	재정 위기	디지털 불평등	지리경제적 대립	천연자원 위기	지리경제적 대립
⑩	생계비 위기	IT 인프라 붕괴	자산 버블	지정학적 자원 경쟁	대규모 비자발적 이주	대규모 환경 재난 재해

\* 범주 : ◆ 경제 ◆ 환경 ◆ 지정학 ◆ 사회 ◆ 기술

※ 자료 : WEF Global Risk Report 2020·2021·2022

2) WEF에서 발표한 The Global Risk Report 2023(2023.1.11.) 보고서를 토대로 재구성

참 고 2 | 세계경제포럼(WEF), 2023년 글로벌 리스크(Global Risks 2023)

【WEF 2023 글로벌 리스크 전체 순위(32개)】

순위	단기(~2년 이내)	장기(~10년 이내)
1	생계비 위기	기후변화 완화 실패
2	자연재해 및 극단적 이상 기후	기후변화 적응 실패
3	지리경제적 대립	자연재해 및 극단적 기후 변화
4	기후변화 완화 실패	생물 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파괴
5	사회결속 실종 및 사회 양극화	대규모 비자발적 이주
6	대규모 환경 재난 재해	천연자원 위기
7	기후변화 적응 실패	사회결속 실종 및 사회 양극화
8	사이버범죄 성행 및 사이버 보안	사이버범죄 성행 및 사이버 보안
9	천연자원 위기	지리경제적 대립
10	대규모 비자발적 이주	대규모 환경 재난 재해
11	재정 위기	잘못된 정보와 왜곡
12	물가 안정화 실패	국제 기구 및 다자간 기구의 비효율성
13	장기 경기 침체	국가 간 갈등
14	국가 간 갈등	재정 위기
15	국제 기구 및 다자간 기구의 비효율성	생계비 위기
16	잘못된 정보와 왜곡	주요 정보 인프라 마비
17	주요 산업 및 공급망 시스템 붕괴	디지털 권력 집중
18	생물 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파괴	기술 진보의 역효과 발생
19	고용 위기	물가 안정화 실패
20	감염성 질병	만성질환과 건강관리
21	대량 살상 무기 사용	장기 경기 침체
22	자산 버블	국가 붕괴 및 불안정성 심화
23	정신건강 악화	고용 위기
24	주요 정보 인프라 마비	주요 산업 및 공급망 시스템 붕괴
25	국가 붕괴 및 불안정성 심화	정신건강 악화
26	만성질환과 건강관리	공공인프라 및 서비스 부족 또는 붕괴
27	공공인프라 및 서비스 부족 또는 붕괴	감염성 질병
28	불법적 경제활동 성행	대량 살상 무기 사용
29	디지털 권력 집중	불법적 경제활동 성행
30	테러리스트 공격	디지털 불평등 및 디지털 접근성 악화
31	디지털 불평등과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악화	자산 버블
32	기술 진보의 역효과 발생	테러리스트 공격

\* 범주 : ◆ 경제 ◆ 환경 ◆ 지정학 ◆ 사회 ◆ 기술

※ 자료 : WEF Global Risk Report 2023

## ■ 2023년 글로벌 위험은 국가 간·분야 간 복합적 위기로 파급력 확대

- WEF는 2023년을 내재된 위험 요소들이 상호 연계되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가능한 파급력을 갖는 ‘복합위기(Poly-crisis)’의 해로 분석
  - (에너지 공급망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공급 경색,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출 통제로 인한 병목현상 등 에너지 수급 불균형은 개발도상국에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정치적 불안정을 유발
  - (생계비 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기본생필품의 가격 상승, 에너지와 식량의 공급 중단, 필수원자재 가격 변동성 증가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경기침체 우려와 함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경제적 압박 가중
  - (인플레이션 상승) 미국, EU, 영국 등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및 부채 관리를 위해 금리 인상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 증가, 유동성 충격, 부채 충격 등 경기 둔화로 이어지며, 글로벌 경기 침체의 장기화 우려
  - (식량 공급 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물 부족, 주요 식량 수출국의 예상치 못한 생산 및 공급 제한으로 글로벌 식량 안보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특히, 생활비 위기가 함께 맞물려 수입 의존국가와 최빈국에는 기아 위험 증가
  - (주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신기술 적용의 확산과 우크라이나, 대만, 북한 등 지정학적 긴장감 심화는 사이버 범죄의 범위 및 영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보안 전문가의 부족, 사이버 위협 규제에 대한 글로벌 합의 미흡으로 인해 더욱 악화

그림 1 | WEF가 선정한 현재 직면한 2023년 글로벌 위기



※ 자료 : WEF, Global Risks Perception Survey 2022-2023

▪ 주요국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인플레이션'으로 글로벌 경기둔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주변국의 금융위기, 공급망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 시사

- 에너지 공급망 위기, 생계비 위기, 인플레이션 압력 등 WEF에서 선정한 현재의 위기와 같이 세계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증가
- 특히, 미국 등 주요국의 긴축통화정책 강화, 유럽의 에너지 수급 불안에 따른 공급 충격, 중국의 방역정책 완화 등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 경기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 한국은행은 세계 3대 경제권(미국·유럽·중국)에서 발생한 경제적 충격의 영향이 지속될 경우, 주요국 경기가 동반 위축되고 경기 회복 흐름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22.12)

【 우리나라와 주요국이 직면한 위험 비교 】

순위	 (미국)	 (중국)	 (영국)	 (독일)	 (한국)
①	재정 위기	지리경제적 대립	생계비 위기	급격한/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급격한/지속적인 인플레이션
②	급격한/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자연재해 및 극단적 이상기후	재정 위기	상품 가격 쇼크	불법적 경제활동의 성행
③	지리경제적 대립	급격한/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급격한/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국가 간 분쟁	공급망 위기
④	생계비 위기	감염성 질병	기후변화 적응 실패	공급망 위기	상품 가격 쇼크
⑤	기후변화 적응 실패	자원에 대한 지정학적 경쟁	생물 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파괴	자원의 지정학적 경쟁	자산 버블
		자산 버블	국가 간 분쟁		
		디지털 권력 집중	자산 버블		

\* 범주 : ◆ 경제 ◆ 환경 ◆ 지정학 ◆ 사회 ◆ 기술  
 ※ 자료 : WEF, Global Risks Perception Survey 2022-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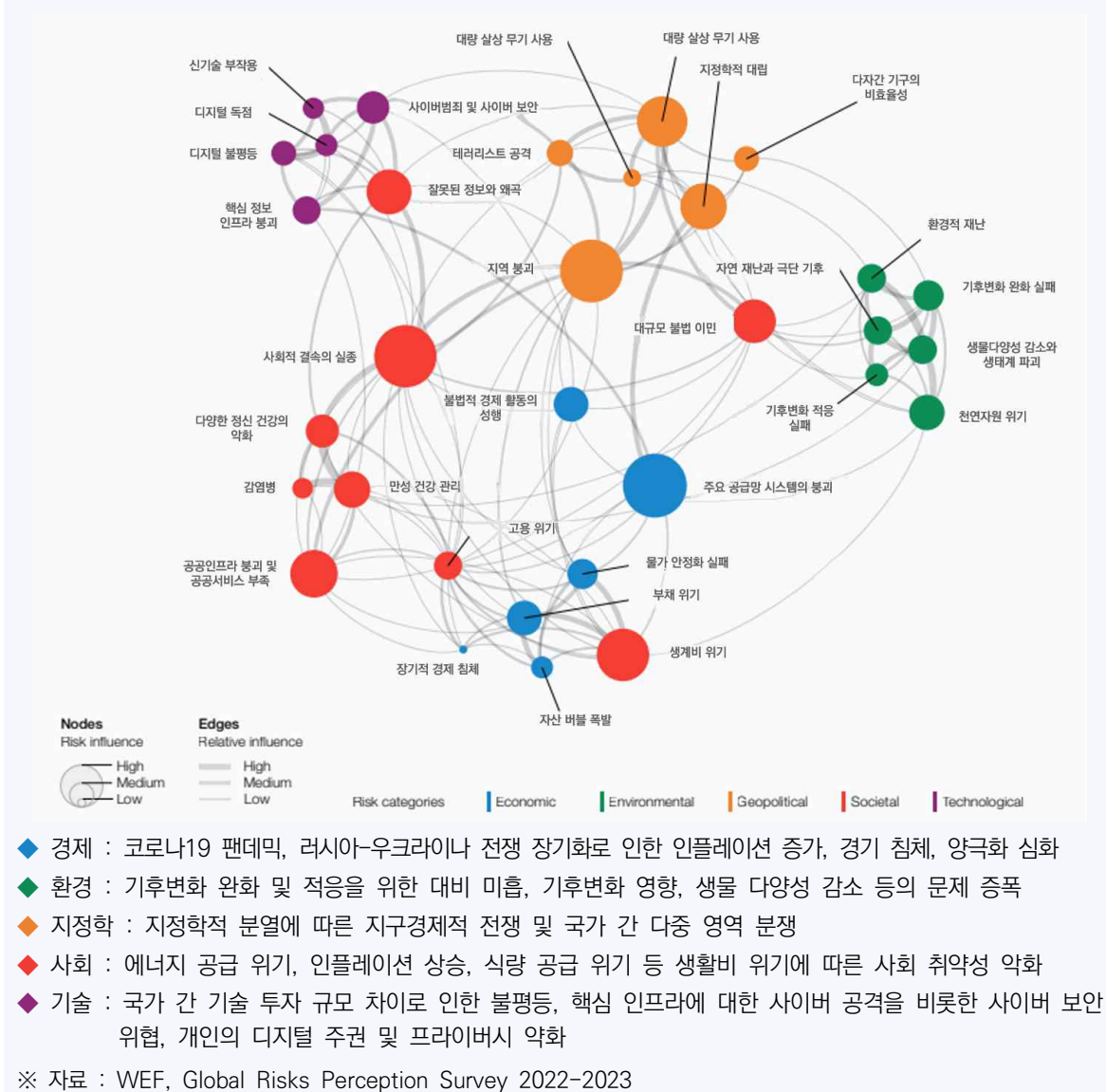
▪ 중국은 경제·사회적 위험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기술경쟁, 러-우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세계 경제의 분절화를 가속화

- 세계 분절화의 위험은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이후, 자국우선주의, 배타적 경쟁 확산 등으로 발전했으며, 최근 미국과 중국 간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한 블록화 조짐은 향후 글로벌 무역 환경과 세계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 미국, 유럽 등 서방 주요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무역 및 금융 제재로 대응하였으나, 러시아는 중국, 인도에 에너지 수출을 확대하는 등 이념적 갈등과 더불어 세계 경제의 분절화 기조는 점차 확대

※ 세계 분절화 충격에 대한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분절화될 경우, 글로벌 실질소득이 최대 5% 내외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특히, 한국, 일본 등 미국 및 중국과 교역이 활발한 국가들일수록 손실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분석(IMF, 2022; Cerdeiro et al., 2021)

- 2023 글로벌 복합위기가 가진 상호 연계성은 정치·경제·사회·환경 등 광범위한 영역으로 파급되기에 글로벌 차원의 시의적절한 조치가 중요
  - 복합위기는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완화 실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인플레이션 심화 등 전 세계에 불확실성이 높은 각종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상호 연계되어 국제적 불안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
  - WEF는 빠르게 진행되는 복합적 위기 상황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음을 우려하며, 국가 간의 협력과 원활한 글로벌 거버넌스 수립의 중요성과 각국 정부의 미래 대응 역량 강화 등 거시적 관점에서 글로벌 협력을 강조

그림 2 | 2023년 글로벌 리스크의 상호연계도



### III. 글로벌 협력 모델로 부상한 ‘디지털플랫폼정부’

#### ■ 협력의 가치를 담은 ‘디지털플랫폼정부’, WEF의 글로벌 아젠다로 채택

- WEF는 공식 홈페이지에 우리나라의 민관협력 기반 국정운영 모델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방향을 담은 기고문 수록(‘23.1.13’)<sup>3)</sup>
  - WEF 요청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혁신전략: 디지털플랫폼정부’(Korea’s new innovation strategy: Digital Platform Government)’를 주제로 작성된 디지털 플랫폼위원회의 기고문이 게재
  - 기고문에는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전자정부 구축의 과정과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 및 성과를 공유하며, 정부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발생한 부처 간 분절적 시스템 및 서비스 구축, 데이터 연계의 어려움 등 문제점도 지적
  -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부처 간 협업과 데이터 공유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통합되고, 개인화된 선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디지털 청사진인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비전을 제시
- 우리나라는 각국 디지털 정부 관계자와 디지털 혁신을 논의하고, 성공적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과 글로벌 디지털 모범 국가로의 도약을 선언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글로벌 디지털 정부 이해관계자들이 모이는 ‘정부 기술 (Gov Tech) 세션’에 참여해 데이터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민간이 함께 참여해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려는 우리나라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을 소개
  - 나아가, 우리나라가 그동안 개도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경험을 공유한 것처럼, 디지털플랫폼정부도 우리나라가 선도적·성공적으로 구축해 디지털 혁신의 경험을 전 세계가 참고할 수 있도록 모범 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
  - 이처럼, 각국의 디지털 정부 의사결정자들과 디지털 혁신에 대한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를 디지털 선도국가로 인정하면서, 우리나라의 경험과 성과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

3) [WEF\(2023.1.13.\), Korea’s new innovation strategy: Digital Platform Government](#)

### 참 고 3 | WEF 홈페이지에 게시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 기고문

-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기존 공공 운용의 한계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플랫폼의 목적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민, 기업, 정부가 협업”하는 것입니다.
- 한국 정부는 올해 3월 디지털플랫폼정부 로드맵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 과제를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출범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혁신전략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같은 해 9월 2일 관계부처 장관 4명과 민간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궁극적으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람 중심의 정부, 과학적이고 투명한 정부, 민간 부문 성장을 지원하는 정부로 국정운영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가 새로운 혁신전략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제시한 배경에는 지난 몇 년 동안 국민은 혁신적인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고도로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새 정부는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선제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전환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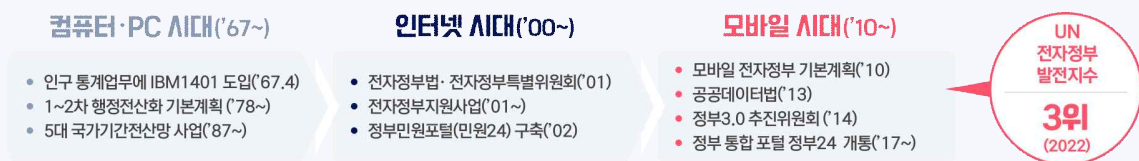
#### 대한민국 디지털정부의 현재...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축 운영해왔으며, 이는 전 세계 많은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2010년부터 UN 전자정부발전지수에서 1~3위를 꾸준히 차지했으며, ICT 인프라, 공공데이터 개방, 정부 혁신을 위한 노력에서도 세계를 선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년의 성공 뒤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향후 20년의 성공을 담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000년대 이후 급속도로 진행되어 온 정보화 과정에서 너무 많은 IT 시스템 사일로가 생겼고, 대부분 정부 부처와 기관은 자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별 시스템을 개발하고 고도화하기 위해 분절적인 조직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홈택스(세금), 워크넷(취업), 복지포털(복지) 등 공공서비스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지만, 부처 간 사일로가 심화되어 시스템과 데이터의 연계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부처 간 사일로는 고도로 개인화된 통합 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 【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발전 과정 】



####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추진 방향...

대한민국은 부처 간 장벽을 허무는 원스톱 정부로 부처간 협업과 데이터 공유를 통해 국민의 관점에서 통합되고, 개인화된 선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을 기반으로 과학적인 정부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민관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OpenAPI를 통해 민간기업의 서비스와 융합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정부는 민관이 함께 다양한 실험과 혁신을 시도하는 테스트베드가 될 것입니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협업하는 디지털플랫폼이 구축되면 데이터 공유와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가 창출 될 것입니다.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 서비스가 최적화되고 시기적절하게 개선되어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이 사용량에 따라 책정됨에 따라 전체 정보시스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파급효과는 가치의 증가와 비용의 감소로 더욱 확장되어 더 많은 혜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디지털플랫폼정부(DPG) 구현을 위한 변화의 방향 】

1단계 | **현행 정부 시스템 간 연계**



2단계 | **DPG by Design**

통합적 서비스와 민·관 협업을 위한  
정부 인프라 재설계 및 개방형 기술표준 마련

3단계 | **DPG 인프라 전환 완료**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과제...**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의 핵심 과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혁신적 인프라를 구축해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완전히 통합된 원스톱 정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선, 통합적 관점에서 기존 시스템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철학에 따라 새로운 혁신 인프라를 설계 및 구축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초거대AI 등 민간의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둘째,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활용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나 제도를 폐지하고, 데이터 표준화, 마이데이터(데이터 자기결정권 향상을 통한 개인 역량 강화), 가명 정보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부가가치 높은 데이터 활용을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인공지능, 데이터 등 기술을 적극 활용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겠습니다. 부처 중심의 분절화된 업무 프로세스에서 탈피하여 민관협력, 부처간 협력,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 중심의 정책 결정이 관행과 경험보다 우선이 되도록 강조할 것입니다. 나아가 공무원들이 AI, 데이터 기반 업무 프로세스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교육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넷째, 정부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안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또는 활용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남용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인공지능, 양자암호 통신 등 첨단 보안기술을 도입하여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이용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 선도 국가로 도약...**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국민과 기업이 찾아오는 정부가 아닌, 국민과 기업에게 먼저 다가가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는 부처가 협업하고, 민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많은 스타트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고, 유능한 스타트업들이 모여 디지털플랫폼정부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세계 표준으로 만들고, 그 성공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다가오는 3월 디지털플랫폼정부 로드맵을 공개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과제를 수립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 갈 새로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 협력과 연대를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글로벌 복합위기의 해법 제안

- 윤석열 대통령은 단독 특별연설에서 디지털 기반 실천적 연대의 방안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제시(‘23.1.19)<sup>4)</sup>
  - 1월 19일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Solidarity in Action)’를 주제로 단독 특별연설에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의 필요성과 상호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의 연대·협력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피력
    - ※ WEF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면 연설을 한 것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
  - 특별연설의 주요 내용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번영을 위해 공급망 복원력 강화,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안보를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보건 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자유·번영에 기여하는 디지털 질서 구현 등 국제협력과 연대의 길을 제시
  - 특히, 민관협력 기반 국정운영 모델로 정부 데이터와 민간의 서비스를 결합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디지털 기술과 혁신의 경험을 공유·확산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표명
  - 나아가, 디지털 심화 시대의 글로벌 인권 가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Digital Bill of Right)’ 수립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향유할 권리를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 신기술이 가져오는 새로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할 것을 강조



“대한민국은 보편적 규범을 준수하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 함께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 협력하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글로벌 질서 정립을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및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통해 세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연대와 협력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홈페이지](#)

4) WEF(2023.1.19.), Davos 2023: Special Address by Yoon Suk Yeol,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참고 4 |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특별연설 -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슈밥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1971년 유럽 경영포럼으로 시작한 이래 반세기를 거쳐온 다보스 포럼에 여러분과 함께 자리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다보스 포럼은 글로벌 아젠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지, 그 방안을 여러분들과 모색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놓여있습니다.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기술 패권 경쟁과 다자무역체제의 퇴조에 따라서 공급망이 분절화 양상을 보이며 재편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공급망의 교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백신과 의약품은 물론 산업의 기반인 반도체와 핵심 광물, 인류에게 꼭 필요한 식량과 에너지 자원 등의 공급 충격이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됐습니다.

이러한 공급망의 재편 과정에서 안보, 경제, 첨단기술에 관한 협력이 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용되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기후변화의 위기, 보건과 디지털 격차는 세계시민의 자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더 강력하게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입니다. 안보, 경제, 첨단과학 기술의 경계선이 사라지면서 B2B 형태의 기업 간 협력뿐 아니라 각 국가의 정부와 민간기업이 서로 교차적으로 원활히 협력하는 G2G와 G2B 형태의 협력 체계가 절실해졌습니다. 분절된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계 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자유 확장에 기여해 온 자유무역 체제는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글로벌 공공재입니다. 장벽을 쌓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과거 세계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지나친 금융화와 양극화라는 문제를 노정시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상품과 자본, 지식과 정보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다양성을 보장하고 연결성을 확대해서 작은 블록을 점점 더 큰 블록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우리가 직면한 '분수령의 시점'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국제 규범 체제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임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블록화로 대표되는 지금의 도전 역시 국제 경제 질서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로 복원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당면한 이 도전들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적 번영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저탄소 전환, 보건 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자유와 번영에 기여하는 디지털 질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호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입니다.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역시 자유와 연대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 간의 튼튼한 연대를 통해 복원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세계시민의 공존을 추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 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보편적 규범을 준수하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 함께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도-대평양 전략은 자유, 평화, 번영을 염원하는 나라들과 함께 협력하고 함께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경제·기술 생태계를 조성하여 인류의 공동 번영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또 다른 과제는 기후 위기의 극복입니다.

기후 위기의 극복은 전 세계의 공통 언어가 됐습니다. 세계 주요국은 넷 제로(net zero)를 목표로 잡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에너지 안보가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는 서로 상충되는 목표가 아닙니다.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원자력 발전과 청정 수소에 주목해야 합니다. 원전은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정부는 원전의 확대를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것임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원전 기술력과 시공, 또 운영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 기술이 필요한 나라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청정 수소는 미래 에너지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소는 철강, 화학, 해운 등 감축이 어려운 분야에서 탄소배출 저감의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동, 유럽 등 그린 수소 생산에 강점을 가진 국가들과 한국, 일본과 같이 수소 활용에 앞서가는 국가 간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앞으로 청정 수소 인증 제도의 설계, 수소의 생산, 활용, 유통에 관한 표준과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국제사회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린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국가 간 기술과 자원의 격차를 줄이고 개도국의 기후 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울 것입니다. 혁신적인 녹색기술을 모든 인류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리더 여러분, 국가 간 보건 격차는 개인의 자유는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협합니다.

한국은 보건 위기 대응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팬데믹 대응 역량의 국가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입니다. 특히, 팬데믹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자원을 조달하고, 백신 생산역량을 높이기 위해 바이오 인력을 양성하며 미래의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는 백신과 치료제, 진단기기와 같은 감염병 대응 수단을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이에 대한 세계시민의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디지털 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심화 시대에 디지털 격차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여 디지털 기술이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여 글로벌 디지털 질서의 정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기술을 향유할 권리를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하는 새로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부의 데이터와 민간의 서비스를 결합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정보 처리, 네트워크의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행정 서비스 수준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며,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기술 선도국가로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분야 ODA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과 경험의 공유, 그리고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슈밥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글로벌 리더 여러분,

지금 세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는 협력과 연대 없이는 해결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의 현대사는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확고한 연대 정신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책임,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장할 책임,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연대, 행동하는 연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우리들의 지혜가 세계시민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고 확장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료 : [대한민국 대통령실\(2023.1.19.\), 대통령의 말과 글, "세계 복합위기, 협력과 연대로 극복"](#)

## ■ 디지털 심화 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의 이미지 강화

- 해외 주요 언론과 포럼 참석자들은 '디지털플랫폼정부'와 '디지털 권리장전'에 관심을 표명
  - 해외 주요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연설에서 언급한 국가 간 신뢰 기반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강화, 세계 블록화 조짐에 대한 연대·협력 등 글로벌 위기 극복 방안과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선도하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모델에 긍정적 호응
  - \* 영국 로이터통신('23.1.19), 일본 닛케이 신문('23.1.20), 호주 더 오스트레일리아 파이낸셜 리뷰('23.1.20), 이집트 달릴할랄('23.1.19.) 등
  - 'Korean Night 2023(한국의 밤)'에 참석한 전 세계 글로벌 리더는 디지털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간, 정부-기업 간 협력과 단합을 통한 디지털 혁신 방안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을 이해하면서, 민·관협력 모델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

【 해외 주요 언론에서 소개된 윤석열 대통령 특별연설 기사 】

영국 로이터 통신('23.1.19)	호주 파이낸셜 리뷰('23.1.20)	이집트 달릴할랄('23.1.19)
<b>"다보스 2023: 윤 대통령,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강화 촉구"</b>	<b>"한국 대통령, 세계가 블록으로 분할하는 것을 놔두면 안된다 호소"</b>	<b>"한국 대통령, 세계 지도자들과 다보스포럼에서 국제 사안의 해법을 논의"</b>
		

※ 자료: [해외문화홍보원\(2023.1.20.\)](#) 재구성

-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 선도과 디지털플랫폼정부 모델의 확산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
  - WEF 및 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 등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3년 세계정부정상회의(2.13.), UAE 정부 디지털 전환 고위위원회와의 디지털 전환 분야 협력에 대한 MOU 체결(2.14.)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모델에 대한 국제적 홍보 성과 확대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심화 시대를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표방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등 국가적 아젠다로 제시 하면서 디지털 선도국가의 이미지 확산



## ■ 참고자료

- 대한민국 대통령실(2023.1.19.), 대통령의 말과 글, "세계 복합위기, 협력과 연대로 극복"
- 한국문화홍보원(2023.1.20.), [카드뉴스]다보스포럼에서 윤대통령이 내놓은 국제적 사안의 해법은
- 한국은행(2022.12.2.), 국제경제리뷰 제2022-14호, 내년도 세계경제의 특징 및 리스크 요인
- 한국은행(2023.1.25.), BOK 이슈노트 제2023-1호, 중국 방역정책 완화 전개상황 및 영향 점검
- WEF(2023.1.11.), Global Risks Report 2023 18<sup>th</sup> Edition
- PwC(2023.1.16.), PwC's 26th Annual Global CEO Survey, Winning today's race while running tomorrow's, <https://www.pwc.com/ceosurvey>
- WEF(2023.1.13.), Korea's new innovation strategy: Digital Platform Government, <https://www.weforum.org/agenda/2023/01/davos23-korea-digital-platform-government/>
- WEF(2023.1.16.), 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https://www.weforum.org/events/world-economic-forum-annual-meeting-2023/about/meeting-overview>

# 2023 WEF와 새로운 글로벌 협력 모델 '디지털플랫폼정부'

## DPG<sup>+</sup>

Digital Platform Government Plus